

〈추진부서〉 경기도 안산시 해양수산과(031-481-2337)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공유재에 대한 권리확보 〈소극적 관행을 탈피한 적극행정으로 전국 최초 공유수면에 점사용료 징수!〉

• 개선배경

- 한국전력공사, 「354kV 영흥도관련 송전선로 건설사업」 당시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 사용 허가(의제협의)’ → 공유수면의 배타적, 독점적 권리 취득
과거 관행에 편승하여 반대급부적 성격인 송전선로 점용료 납부를 이행하지 않음

※ 관련규정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5호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별표4] 〈도면#33〉

▶ 점용료 징수를 위한 법령 근거 마련 및 행정소송 수행

• 개선내용

개 선 전	개 선 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수면 상부공간 법령 및 개념 미흡으로 송전선로 허가시 부터 최근까지 길이(선,km)로 점용사용 징수됨. (점사용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지 못한 20년 이상 관행 개선 필요) - 허가당시 부과하지 못한 점용료를 법령에 근거한 소급징수 여부(신뢰보호원칙 검토) - 송전선로 면적 및 비용 산정에 대한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전선로 점용료 대상 중앙부처 법령 질의 및 점용료 산정에 대한 훈령 개정 - 공유수면법의 명확한 해석 및 적극적 법률 검토 (관행타파), 즉시 행정처분 - 3년간 적극적 소송대응(신뢰보호 위반여부) - 공유수면의 점사용료 징수는 정당한 행정처분 판결(2019.10.8.) - 판결에 따른 한전과 현장 합동점검 및 측량

- 과거 소극적 행태를 탈피하여 불확실한 법령의 명확한 해석과 적극적 행정 행위를 통한 공유재(공유수면) 이용의 공정성을 확보한 전국 최초의 사례 발굴

• 개선내용

- (국토관리적 측면) 공유수면법에 규정한 정당한 행정행위 전국 최초 실현
 - 공공재의 무분별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고갈되기 전 관리 실현
- (경제적 측면)
 - 2013년~2019년 공유수면 소급징수 점용료 250억원(향후 매년 약 40억원 부과 징수)
 - 21개 시군 적용가능 : 한국전력공사와 지자체 간 갈등 비용, 소송 비용 절감

• 보도자료

‘신뢰 보호의 원칙’의 희생양 市, 한전에 215억 소송 1심 ‘패소’

市, 2017년 개정 시행령 따라 월납 선하지 215억 정용료 징수
한전, “월납 이의 공유수면 정용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며 소 제기
담당자 행정처리에는 문제 없어... 市, “항소 할 것” 2심 결과 주목

안산시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에서 제기한 대부도 공유수면 정용료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시는 지난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정용료 215억5천22만8천720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정부(재판장 권대진)는 지난해 1월 10일 대법 1심 선고에서 안산시가 지난해 3월 한전에 부과한 정용료·사용료 215억5천522만8천720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시가 그간 한전에 대부도 공유수면에 설치, 사용해 온 송전철탄 41기의 월납 부과에 대해 부과된 정용·사용료 이외에, 지난해 3월 한전 측이 제출한 도면에 의거해 총 47기의 월납이 점유하고 있는 공중공간(선하지)에 대한 정용료를 추가로 부과해 납부 받은 비용을 한전 측에서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한전은 월납 선하지의 정용료 부과에 대해 시의 부과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의했음, 송전철탄의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 잘못 선정되었고, 공유수면 정용료가 당시 정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에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시가 부과한 법률상 근거에는 문제가 없으며, 해당 업무 규정에는 대양수산부고시로 시행된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재판관측에 불과하기에 토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정용료가 당시 정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에 위법하다는 한전의 주장에는 한전 측의

‘명당한 신뢰에 반하여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보다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해 안산시가 한전에 지게 할 신뢰보호의 원칙을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한 정용료 부과보다 우선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까지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하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과연 한전이 안산시에 대해 개인의 입장을 위한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시정조정위원회 열어 위 사건을 주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항소에 들어갈 것”이라며, “공직자의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된 적법한 부과였기에 시는 끝까지 법적 대응을 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관저사 >> 4면
이태호 기자 ka@ansannews.com

〈보도일자:2019.6.18.〉

안산시, 공유수면내 송전선로 점용료 받는다

〈전국 최초〉 〈시화호·대부도 일대〉

한전, 市 상대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부과 적법’ 판결
매년 40억여원 세외수입 ‘추가확보’ 시민위한 사업 투입 예정

안산시가 전국 자치단체 최초로 공유수면 내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를 받게 됐다. 시는 송전철탄 설치에 따른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 세외수입 매년 40억여원 내역을 받아 시민들을 위해 사용하기로 했다.

17일 안산시에 따르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탄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최근 받았다.

부과 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지난 2004년 설치한 월납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다. 송전선로는 ‘345kV 영흥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시화호 수면 16km 길이에 걸쳐 설치돼 영흥와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기 서남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시는 매년 주변 공사자금을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올해 30억원으로 추정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사자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송전철탄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돼 왔으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관례가 없었다. 이에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송전선로 산하지(전선 아래 토지 및 수면에 대해서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질의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2010년 1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 매립법이 통합돼 제정된 ‘공유수면법’ 등에서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어 점용료 부과 근거가 명확했기 때문이다.

특히 시는 2018년 3월 한전에 점·사용료 219억원(2013년 3월~2018년 5월)을 부과하고 전액을 납부받았으나 한전이 두 달 뒤 송전선로 점·사용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전으로 이어졌다.

시는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민들을 위한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윤화섭 시장은 “시의 적극 행정으로 송전철탄설치에 따라 자연경관 훼손, 생태계 파괴 등으로 피해를 겪는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연성/김태경 기자 kimd@kyeongin.com

〈보도일자: 2020.2.18.〉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로 시민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확보



안산시 해양수산과
이 지 선
(031-481-2337)

시민들이 바라보는 공무원은 어떤 모습일지 한 번씩 생각해 봅니다.
‘복지부동, 탁상행정, 내 세금으로 월급 받은 사람’ 등 이젠 이런 비판적인
말은 옛말이 되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을까?
규제는 안전·환경·미래자원 보존 등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지만, 간혹
적극적이고 끈질긴 노력으로 불필요한 규칙을 개선해야 할 때가 있다.

산업의 발전으로 전기 수송을 위한 송전선로 설치의 불가피한 시설물이지만
누구도 찬성하지 않는다. 과거 법령 미흡으로 공공재 공유수면 점용료를
부과하지 못하였으나 해양수산부 훈령 개정 요청을 통해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여 송전선로 점용료를 징수하게 되었다.

과거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는 전국에서 첫 사례로,
대형로펌을 상대하여 3년간 행정소송을 진행했다. 처분 전 법률자문이 부정적
임에도 소신 것 행정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1심에서 신뢰보호 원칙 위반으로
완전 패소하여 내외부의 질타에도 꺾끗하게 행정소송을 준비하여 최종 점용료
징수권을 확보했다.

새로운 세원을 연간 40억 원씩 징수하게 되어 시 재정에 반영하여 우리시민을
위해 사용하므로 모두가 공유재를 공평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이다.
실패란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기 때문이지만, 성공은 포기하지 않고 노력의
결과물인 것 같다.